제99호(2014. 11. 28.)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

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1. 저농약인증제의 폐지와 정책 이슈 ·····1
2. 저농약인증제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업 동향과 문제 ·····3
3. 친환경농업 인센티브로서 직불제의 문제 ·····7
4.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향 ·····11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감 수 박준기 연구위원 02-3299-4173 jkpark@krei.re.kr
내용 문의 정학균 연구위원 02-3299-4248 hak8247@krei.re.kr
자료 문의 성진석 선임전문원 02-3299-4212 jssaint@krei.re.kr

■ 「KREI 농정포커스」는 농업·농촌의 주요 동향 및 정책 이슈를 분석하여 간략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 이 자료는 우리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요 약

○ **정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육성 정책을 추진**

-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생산하는 방식으로 안전한 농산물 공급과 환경보전에 기여
-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함과 동시에 일반농산물과의 가격차별화를 통해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킴으로써 FTA 등 대외 여건변화에 대응한 미래성장동력

○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감소**

- 2015년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따라 유기 및 무농약으로 전환 의향 농가는 36.4%에 그침. 특히 과실류는 전환 의향 농가가 17.0%로 가장 낮았는데, 이는 유기 및 무농약 과실류의 재배난이도 및 생산비가 가장 높기 때문임
- 저농약에서 상위 인증단계로 전환 시 애로사항으로는 노동력 확보, 재배 기술 습득, 적절한 가격차별화 등인 것으로 나타남

○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는 품목 간 지급단가의 차별성 부족, 한시적 직불금 지급 등으로 실효성이 낮음**

- 품목별 일반농업 대비 재배 난이도 및 생산비가 상이하나 지급단가는 논과 밭 그리고 인증종류별로만 차등 지급
- 친환경농업이 가지는 환경보전적 가치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직불금 지급이 필요하나 현재는 한시적 지급
- 최근 소득 감소로 유기 및 무농약에서 일반농업으로 회귀하는 농가가 증가함. 저농약인증제 폐지(2015년)에 따라 일반농업 회귀 농가 증가 전망

○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의 핵심 정책수단인 친환경농업직불제 개편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함

  ① 품목별 지급단가의 차별화 및 적정 수준의 단가 인상

  ② 환경보전 기능을 고려하여 지속적 지원제도로 전환

  ③ 스위스, 일본 등 외국의 친환경직불 이행조건 검토 및 국내 적용 방안 모색

1. 저농약인증제의 폐지와 정책 이슈

▫ 친환경농업은 미래농업의 중요 대안으로 육성 중

○ 친환경농업은 합성농약과 화학비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거나 적게 사용하여 농산물을 재배함으로써 환경 보전 기능 수행

○ 정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추진해 왔음

– 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친환경농업 육성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생산, 유통,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시행함

▫ 정부의 육성정책에 힘입어 친환경농업은 꾸준히 성장하면서 국산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 확보, 농업의 환경부하 감소 등의 성과 실현

○ 친환경농업의 재배면적은 2000년 2,039ha에서 2013년 141,652ha로 증가하고, 전체 경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동 기간 0.1%에서 8.3%로 상승

○ 화학비료 사용량은 2000년에 ha당 382kg에서 2012년 267kg로 약 30% 감소(김창길 외 2013)

○ 친환경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의 경제적 가치는 2013년 기준 토양 및 물 관련, 생물다양성 유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 등 약 2조 900억 원으로 추정됨(정학균 외 2014)

○ 밭을 논 이외 농지라는 소극적 인식에서 벗어나 우리 사회의 핵심 미래 자원으로 보려는 관점이 나타남

“
정부는 소비자에게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소득을 증대시키며,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 추진
”

저농약인증제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현상 초래

▫ 친환경농업의 질적 발전을 위한 저농약인증제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업의 성장을 어렵게 하는 현상 초래

○ 정부는 친환경농업의 내실화와 질적 발전을 위해 2009년 친환경농업육성법 개정으로 가장 낮은 단계인 저농약의 신규인증을 2010년부터 중단하여 2015년에 이를 완전 폐지하기로 결정

○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상응하는 새로운 인센티브를 마련하지 못한 상태에서 새로운 제도로 전환한 결과 신규인증의 급감, 관행농법으로의 회귀 증가, 농가의 친환경농업 지속 의욕 감퇴 등의 현상이 지속되어 친환경농업의 건실한 발전을 어렵게 할 수 있는 요인으로 등장

2. 저농약인증제 폐지 결정 이후 친환경농업 동향과 문제

▫ 2010년 이후 친환경농산물 인증물량 지속적 감소

○ 전체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수, 인증량, 면적은 2009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감소(저농약인증 농산물 감소가 주 요인)

– 전체 면적은 2010년 이후 저농약인증 면적의 감소로 연평균 8.4%의 감소세로 전환

– 이에 따라 전체 농산물 생산 대비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도 감소세

※ 생산농가(천 호): ('09) 198.8 → ('13) 126.8 ⇒ 36% 감소

※ 생산량(만 톤): ('09) 235.8 → ('13) 118.1 ⇒ 50%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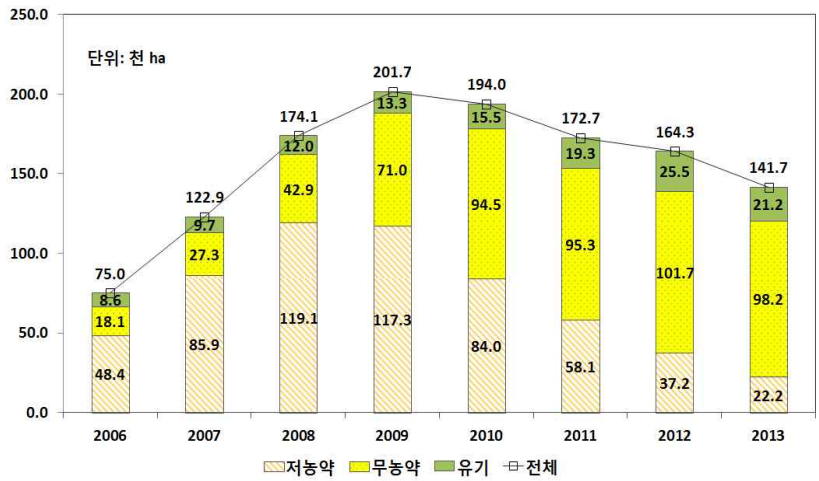
※ 재배면적(만 ha): ('09) 20.2 → ('13) 14.2 ⇒ 30% 감소

※ 전체 농산물 중 친환경농산물 생산 비중(%): ('08) 11.9 → ('09) 12.2 → ('13) 8.3

○ 한편, 유기와 무농약 인증면적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단가 인상(2012년)과 지방자치단체의 유기 및 무농약 인증 농산물 생산 확대 정책에 힘입어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2013년에는 부실인증 여파로 감소세로 전환

※ 유기+무기 인증면적(천 ha): ('09) 84.4 → ('12) 127.1 → ('13) 119.4

그림 1.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 추이



자료: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홈페이지(2014)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2009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매년 꾸준히 감소세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결정 이후 저농약 인증 농가 상위 인증단계보다는 관행농업으로 많이 회귀

▫ 저농약인증제도 폐지 결정 이후 저농약 인증 농가 중 다수가 상위 인증단계보다는 관행농업으로 회귀

○ 2010년 이후 저농약 인증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고, 유기와 무농약은 증가세를 유지하다가 2013년에 부실인증 여파로 감소세로 전환됨. 2010년 이후 유기와 무농약은 전체 35,061ha 증가하였고, 저농약은 60,036ha 감소하였음

- 유기와 무농약 증가 면적이 모두 저농약으로부터 전환된다고 가정하여도 24,975ha는 관행농업으로 회귀한 것임

표 1. 2010년 이후 재배면적 전년 대비 변화량

단위: ha

	2010~2009	2011~2010	2012~2011	2013~2012	합계
유기+무농약	25,668	4,514	12,560	-7,681	35,061
저농약	-7,682	-21,334	-8,383	-22,637	-60,036

자료: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2014)

▫ 저농약 농가 중 관행농업으로의 회귀 농가 늘어날 듯

○ 저농약 인증제가 폐지(2015년)되면 유가무농약으로 전환하겠다는 농가는 36.4%(102명)에 그침(정학균 외 2013)

○ 전체 친환경농산물 생산량의 27.9%(2013년 기준)를 차지하는 과수류는 저농약 인증 비율이 70.0%나 되는데, 향후 유기와 무농약으로의 전환 의향은 17.0%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였음

표 2. 저농약인증농가의 인증 폐지에 대한 대응계획

단위: %

구 분		유기 전환	무농약 전환	저농약 유지[1)]	GAP 전환	관행 재배	계
저농약 품목류	곡류	8.8	50.0	13.8	3.8	23.8	100.0
	과실류	3.0	14.0	42.0	32.0	9.0	100.0
	채소류	6.0	32.0	27.0	26.0	9.0	100.0
전 체		5.7	30.7	28.6	21.8	13.2	100.0

주: 저농약인증제도 폐지와 상관없이 저농약 농산물을 계속 생산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치(2013)

▫ 저농약 농가가 상위단계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꺼려하는 가장 큰 요인은 기술적 어려움과 소득 감소

○ 저농약인증 농가의 유기와 무농약으로의 전환 비율이 크게 낮은 이유는 품목 간 재배난이도 및 생산비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임

– 곡류 친환경재배의 일반재배와의 소득차이는 10a당 98~117천 원, 채소특작류는 130~164천 원, 과실류는 161~203천 원으로 각각 나타남(정학균 외 2014)

표 3. 친환경재배와 일반재배 소득 차이(감소분)

단위: 천 원/10a

	소득(일반-유기)	소득(일반-무농약)
곡류	117	98
채소·특작	164	130
과실류	203	161

주: 일반재배 농가 소득에서 유기재배와 무농약재배 농가의 소득을 감하여 산출
자료: 정학균 외(2014)

– 저농약 농가 중 관행농업으로 회귀하고자 하는 이유로 조사대상 농가 중 70% 이상이 유기나 무농약 등의 친환경농법 실천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함

– 무농약 및 유기인증이 농산물 판매에 큰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는 응답이 채소류 55.6%, 과실류 33.3%였음

표 4. 관행농업으로 전환 이유

단위: %

구 분		친환경농법이 어려워서	무농약 및 유기인증이 판매에 큰 효과가 없어서	관행농업이 오히려 소득이 높음	무농약 및 유기인증의 직불금이 적어서	계
저농약 품목류	곡류	84.2	0.0	10.5	5.3	100.0
	과실류	66.7	33.3	0.0	0.0	100.0
	채소류	44.4	55.6	0.0	0.0	100.0
전 체		70.3	21.6	5.4	2.7	100.0

자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조사치(2013)

“품목 간에 재배난이도 및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하며, 과실류의 소득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남”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 마련 필요

□ 저농약 인증제 폐지의 문제

○ 저농약인증은 무농약, 유기 등 본격적인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준비단계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반영되지 않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득 감소 위험을 덜어주는 완충 작용을 해옴

○ 저농약 인증제 폐지로 친환경농업의 성장 속도가 둔화될 것이라는 것은 당초에 예상하였으나 저농약인증제 폐지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지 않아 자칫 친환경농업의 성장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측면도 간과할 수 없음

○ 예컨대 친환경농업의 제도적 인센티브는 직불금의 지급이 거의 유일하나 이것이 한시적으로 지급되며, 품목별 친환경 기술의 난이도를 반영하지 않고 전 품목에 동일한 금액이 지급됨으로써 인센티브로서 충분히 작동하지 못해 저농약인증제 폐지의 충격을 대체하지 못함

○ 저농약인증제 폐지는 지자체의 친환경농업 정책에도 영향을 미쳐 지원수준 감소로 인한 재정여력이 있음에도 친환경농업을 위한 추가적인 인센티브 관련 지원책 마련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3. 친환경농업 인센티브로서 직불제의 문제

▫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1997. 12.)하고, 1999년부터 친환경농업직불제를 도입하여 소득 감소분을 보상

○ 친환경농업은 실천 초기 단위면적당 수확량이 적고, 생산비가 높아 일반농업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음

○ 직불금의 지원단가(2014년 기준)는 밭의 경우 친환경농업과 일반농업의 소득차이를 보전하는 수준(ha당 1,000~1,200천 원)이며, 지원기간은 저농약무농약이 3년, 유기농이 5년으로 한시적임

표 5. 친환경농업 직불금 단가 변화

연도	ha당 지급액(천 원)		특징
	밭	논	
2003	유 기 794 무농약 674 저농약 524	유 기 270 무농약 650	인증단계 따라 지급단가 차등 지원
2006	유 기 794 무농약 674 저농약 524	유 기 392 무농약 307 저농약 217	논 지급단가 인상
2012	유 기 1,200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유 기 600 무농약 400 저농약 317	논, 밭 지급단가 모두 인상 유기 지급기간:'3년'→'5년'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개편안(2012)

▫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으로 직불금 지급 감소 추세

○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실적을 보면 2010년까지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감소세로 전환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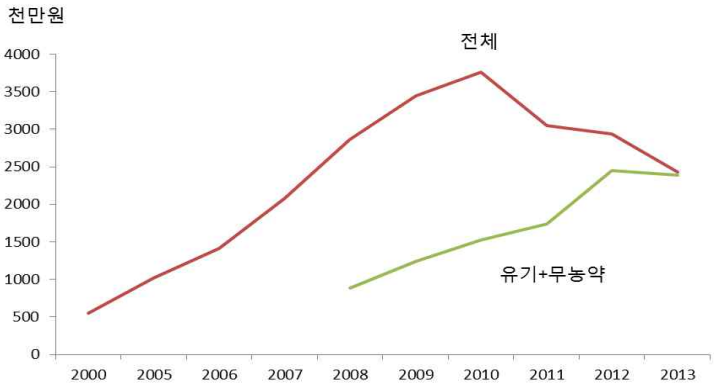
- 유기와 무농약 인증에 대한 집행실적은 2009년 이후 연평균 약 30% 증가하였으나, 2013년에는 약 3% 감소

※ 친환경농업직불금 집행실적(억 원): ('09)345억 원 → ('13) 247억 원 ⇒ 약 30% 감소

※ 유기, 무농약 집행실적(천만 원): ('09) 1,242 → ('13) 2,388 ⇒ 92% 증가

"친환경농업직불제 지불금 집행실적은 저농약 신규인증 중단 등으로 감소 추세"

그림 2. 친환경농업직불제 지불금 집행실적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 상위 인증단계의 비중 확대 등으로 농가당 집행실적 증가

▫ 친환경 직불금은 농가소득의 1.6%

○ 친환경직불금 단가 인상, 상위 인증단계의 비중 확대 등으로 농가당 집행실적은 2008년 296천 원에서 2013년 542천 원으로 증가하였으며, 농가소득 가운데 직불금 비중은 1.6% 수준임

표 6. 농가당 직불금 집행 실적

단위: 천 원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96	307	323	347	491	542

자료: 농림축산식품부(2014)

▫ 품목별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동일한 지급단가

○ 일반농업 대비 친환경농업 전환 및 유지 시 투입비용은 품목별로 상이하나 직불제의 지급단가는 논밭과 인증종류별로만 차등 지급

– 2012년 직불금의 지급 단가가 인상되었지만 품목에 상관없이 동일한 직불금이 지급되고 있어 재배가 어렵거나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품목의 확대는 어려운 실정

※ 현행 지급단가(ha당 지급액, 천 원): 〈밭〉 유기 1,200, 무농약 1,000 저농약 524 〈논〉 유기 600, 무농약 400, 저농약 317

○ 특히 품목별로 저농약 의존율이 달라 2015년 저농약인증 폐지 시 품목별로 동일한 지급단가를 적용하는 방식은 상위 인증 전환 유도에 한계가 있음

□ 한시적인 직불금 지급에 따른 농가의 친환경농업 유지 당위성 결여

○ 현재의 한시적인(3~5년) 직불금 지원은 친환경농업으로 진입하는 농가의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신규 진입 농가에게만 혜택

※ 현행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산물을 계속하여 생산하는 경우 최초 지급 연도로부터 필지별로 3년간(불연속인 경우 3회), 유기재배 필지는 5년간(불연속인 경우 5회)으로 지급기간을 제한하고 있음

> 현재의 한시적인 직불금은 신규 진입 농가에게만 혜택

○ 반면 수혜기간을 초과한 농가는 직불금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어 제도적 박탈감과 친환경인증에 따른 실질적 혜택 부족

– 특히, 친환경농업은 일반농업보다 기후나 환경변화에 민감하여 기술적 안정과 판로 확보 등 진입 후 경영 정착에 많은 시간이 소요됨

○ 유기재배 농가의 경우 약 11%, 무농약재배 농가의 약 20%가 직불금 수령기간(3~5년)이 끝난 후 일반농업으로 회귀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재배기술 습득 및 가격차별화의 어려움 등으로 소득이 감소한 결과로 분석됨

표 7. 직불금 수령완료 후 관행농업 회귀 농가 현황(2012년 기준)

구분	2011년 직불금 수령완료 농가(호)	관행농업 회귀 농가(호)	회귀 비율(%)
유기	1,325	141	10.6
무농약	17,029	3,446	20.2

자료: 농식품부 친환경농업과 내부자료(2013)

주요 유기농업 선진국에서는 지속직불금 제도를 통해 실천농가 지원

□ **독일, 프랑스 등 주요 선진국은 친환경직불금을 품목별로 차별화하며, 지속적으로 지원**

○ 주요국의 유기농업 직불제도를 살펴본 결과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 유기농업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높은 나라들은 경작형태별로 차별적으로 직불금을 지급

○ 유기농업을 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영구적으로 직불금을 지급함

– 우리나라는 논과 밭으로만 구분하여 지급하고 있고, 지속직불금 제도가 없음

표 8. 주요국의 유기농업 직불제도

	독일	프랑스	스위스	미국	일본	한국
면적 비중	6.2%	3.4%	11.4%	0.5%	0.2%	1.5%
경작형태별 차등제도	경작지, 목초지,영년생작물, 채소류	콩류,와인, 1년생작물, 목초지	개활지, 일반농경지, 포도, 홉, 과일 등	유기농시스템 계획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이행하는 조건	잡곡, 사료작물을 제외하고 동일 지급	논과 밭으로 구분
지속직불제도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	6년차 이상 농가에 지급	지속적으로 지급	없음	지속적으로 지급	없음

자료: 정학균 외(2014)

4. 친환경농업직불제 개선방향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 육성에 가장 효과적

○ 농식품부는 친환경농산물 재배면적(무농약 이상)을 2015년 전체 농산물 재배면적의 12%, 2017년 15%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으나 실제 확대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낮은 수익성과 저농약 신규인증 폐지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량, 농가수, 면적은 2010년 이후 감소세이며, 2015년 저농약인증제가 완전히 폐지될 경우 감소세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

- 특히,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의 추진방향은 저농약농업에서 무농약 및 유기농업으로 인증단계를 높이는 것이지만 저농약농업에서 유기농업으로의 전환에는 많은 제약이 있어서 쉽지 않음

○ 친환경농업직불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에 대한 개선방안 모색 필요

- 친환경농업 직불금 규모를 10% 늘리면 5년 후 친환경농업 생산량이 3.6%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는 친환경 농업지구 조성 또는 친환경유통지원 사업규모를 10% 확대하거나, 토양개량 사업규모를 10% 늘리는 경우보다 더 효과적임[1)]

▫ 낮은 수익성, 제도변화 등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지속적 지원 없이는 친환경농업 확대 어려워

○ 정부는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고 농업 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농업을 실현하기 위해 친환경농업 육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음

○ 현행 친환경직불금 지급단가의 차별화 부족과 한시적 지원으로 친환경농산물 인증량은 2010년 이후 감소세에 있음

- 전국에서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비중이 가장 높은 전라남도의 경우 지자체 친환경보조금 지원으로 무농약 및 유기인증 면적이 증가하였으나, 향후 지속 여부는 불확실

>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

1) 김창길 외. 2013. 『지속가능한 농업시스템 구축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국민소득 및 구매력 증가로 친환경농산물시장 소비증가가 전망되었으나, 아직까지는 생산비 증가 속도보다는 생산성 및 가격상승 속도가 낮음

- 일반농산물과의 가격 차이(프리미엄)가 크지 않은 것은 여전히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지불 의향이 낮다는 의미

○ 환경보전·경관유지·생물 다양성 등 농업·농촌이 창출하는 공익적 효과를 제고하고, 소비자에게 깨끗한 환경 및 안전한 고품질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을 지속하기 위한 정책적 뒷받침이 되어야 함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한 핵심 프로그램인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 조정 등 개선방안 모색 필요

친환경농업 직불제는 지급단가의 품목별 차별화 및 지급기간 연장 추진 필요

□ 친환경농업육성을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직불제의 품목별 지급단가 차별화 및 지급기간 조정이 핵심

○ 지급단가의 품목별 차별화 및 적정 수준의 지급단가 인상

- 현행 인증 종류(저농약, 무농약, 유기)와 논, 밭으로만 분리된 지불단가에서 품목별 소득, 생산비 등을 고려한 지급단가로 차별화 필요

※ 특히, 과수류의 경우 현재 저농약 재배 비중이 70.0% 이상으로, 2015년 저농약인증제가 폐지되면 무농약·유기 인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유도 방안이 필요

○ 유기농 직불금의 경우 환경보전 기능 등을 고려하여 한시적 직불금에서 지속직불금으로 제도 전환 필요

- 현재 한시적 직불제는 직불금 수혜기간 종료 후 일반농업으로 회귀하는 농가가 발생하여 정부예산투자 및 정책추진상 비효율적
- 친환경농업 선진지역인 유럽(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우 지속직불금을 추진하여 일반농업으로의 이탈을 막고 유기농업으로 정착을 유도하여 정책추진의 효율성 달성
- 직불금의 남용 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및 지자체의 관리감독 시스템 마련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2014년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정학균, 김창길, 한석호, 서강철)
제98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8호 한·중 FTA 타결과 농업 부문의 과제(어명근, 이병훈, 정대희)
제97호 밭농업의 쟁점과 발전방향(채광석, 김홍상, 이용선, 김경필, 국승용, 문한필)
제96호 농식품 수출의 FTA 활용 현황과 과제(어명근, 이병훈)
제95호 농업구조 변화와 농가경제, 정책적 시사점(김미복, 박성재)
제94호 지역 간 연계협력 현황을 통해서 본 지역행복생활권 정책 과제(송미령, 권인혜)
제93호 쌀 관세화 전환과 수입 가능성(김태훈, 승준호, 박동규)
제92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4년 추석 출하 및 가격 전망(박기환, 김태훈, 지인배, 최병옥, 박동규)
제91호 FTA 국내보완대책의 성과와 개선 방향(문한필, 정민국, 남경수, 정호연)
제90호 농어촌특별세 운용 실태와 정책과제(박준기, 김미복)
제89호 한·EU FTA 발효 3년, 농축산물 수출입 변화와 과제(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정민국)
제88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성과와 과제(송미령, 성주인, 김광선, 조미형)
제87호 소나무재선충병과 방제 정책 과제(이요한, 석현덕, 구자춘)
제86호 한·칠레 FTA 10년, 농업분야 이행평가(문한필, 정호연, 김수지, 김영준)
제85호 한·미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정민국, 문한필, 지성태, 이현근, 남경수)
제84호 AI 발생 및 대응 상황과 방역정책 추진 방향(허덕, 한봉희, 김형진, 이형우, 김진년)
제83호 2014년 주요 농정이슈와 정책 과제(황의식, 이계임, 송미령)

2013년

제82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3년 국민의식 조사 결과(김동원, 박혜진)
제81호 중국 농업의 현황과 농정 동향(정정길)
제80호 단기소득 임산물의 유통 현황과 주요 과제(정호근, 권오복, 석현덕)
제79호 산지축산의 유럽 사례 및 시사점(석현덕, 문지민, 박소희)
제78호 2013년 김장철 주요 채소의 수급 전망(서대석, 노호영, 이금호, 이형용, 한은수)
제77호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이 육류 시장에 미치는 영향(허덕, 이형우, 김원태, 김형진, 한봉희)
제76호 해외조림투자 확대를 통한 신성장 동력 발굴(이요한, 석현덕, 한기주)
제75호 쌀 직불제의 합리적 운용 방안(박동규, 승준호)
제74호 협력적 산림관리 거버넌스 구축방안(석현덕, 박소희)
제73호 DDA 농업협상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송주호)
제72호 2014년 이후 한육우 사육과 가격 전망(허덕, 우병준, 이형우, 김태우)
제71호 지역임업 활성화를 위한 산림산업 클러스터 육성 방안(석현덕, 안선진)
제70호 주요 농축산물의 2013년 추석 가격 전망(이용선, 우병준, 서대석, 승준호)
제69호 농업의 6차산업화 개념설정과 창업방법(김태곤, 허주녕, 양찬영)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68호 주요국의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실태와 산림환경서비스 보상 방안(정호근, 석현덕)
제67호 2013년 7월 북한의 수해 상황과 경제적 피해(권태진, 임수경)
제66호 농촌 6차산업화를 위한 농촌관광의 발전 방향(박시현)
제65호 유기농업의 기술 수요와 기술개발 로드맵(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64호 농업총조사에 의한 시·군별 농업경쟁력 평가(이병훈, 윤종열, 윤영석)
제63호 국민행복을 위한 산림환경서비스의 정책 방향(석현덕, 안선진)
제62호 한·EU FTA 발효 2년, 농업부문 영향과 과제(문한필, 이현근, 남기천)
제61호 유전자변형 작물의 수입 현황과 과제(성명환, 박지연, 정원희)
제60호 창조경제, 농업·농촌의 새로운 활력증진 전략(박준기)
제59호 사료 원료의 수입 실태와 수입가격지수 산정(성명환, 윤재웅)
제58호 엔화 환율 하락에 따른 농식품 수출의 영향과 과제(박기환)
제57호 농어업재해보험제도 개편의 효과 분석(정원호, 최경환)
제56호 농촌 일자리 창출의 가능성과 정책 과제(송미령)
제55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54호 산불 관리의 현황과 개선 과제(정호근, 박소희, 석현덕)
제53호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에 관한 국민 지불의사와 지불금액 평가(김용렬, 정학균, 민자혜)
제52호 마늘 수요의 변화와 정책 과제(김성우, 노호영)
제51호 한·미 FTA 발효 1년, 농업부문 영향 분석(정민국, 문한필)
제50호 농식품 수출의 최근 동향과 지원 방안(박기환)
제49호 식물공장의 전망과 정책 과제(김연중, 한혜성)
제48호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정책 방안(지인배, 허덕, 송우진, 우병준)
제47호 2012년 농촌관광 수요와 시장규모(김용렬, 박시현)
제46호 종자산업의 도약을 위한 과제(박현태, 박기환)
제45호 축산물 유통의 주요 쟁점과 개선 방안(정민국)
제44호 국민행복 시대의 산림정책 방향과 과제(석현덕, 장철수, 민경택, 정호근)
제43호 정부 농기계임대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강창용)
제42호 도시민이 바라는 농촌정주 공간의 모습(김용렬, 성주인)
제41호 농자재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 사례와 시사점(강창용)
제40호 소비자의 안심 식탁을 위한 정책 과제(이계임, 이동소)
제39호 2013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박준기)

2012년

제38호 농업·농촌에 대한 2012년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37호 농업수입보장보험의 필요성과 도입 방안(정원호)
제36호 식품 수급의 최근 동향과 시사점(황윤재)
제35호 2012년 김장 수급 전망(서대석, 이형용, 권회민, 이용선)
제34호 사료가격안정기금 도입의 영향 분석과 시사점(송우진, 정민국)

「KREI 농정포커스」 발행목록

제33호 국제 곡물가격 상승과 장단기 대응방안(성명환, 한석호, 승준호, 신승희)
제32호 도시농부: 도농상생의 가교(김태곤, 허주녕, 김예슬)
제31호 외국인이 본 우리나라 농촌관광(김용렬, 윤유식)
제30호 농산물 비축사업의 실태와 개선 방안(최병옥, 승준호)
제29호 2012년 추석 과일 수급 전망(한재환, 신유선, 이미숙, 윤종민, 이용선)
제28호 최근 농가경제의 동향과 정책 과제(이병훈, 윤영석)
제27호 중국의 FTA 협상 전략과 한·중 FTA에 대한 시사점(최세균, 전형진, 정대희)
제26호 농촌지역 마을회관의 이용 실태와 시사점(김동원, 이병훈, 김광선, 박혜진)
제25호 약용식물의 수급 동향과 정책 과제(정호근, 조국훈)
제24호 학교급식 식재료 공급의 실태와 개선방안(국승용)
제23호 구제역 이후 양돈산업의 동향과 과제(정민국, 우병준, 김원태)
제22호 북한의 가뭄 실태와 영향 분석(권태진, 남민지)
제21호 농어촌의 과소화 마을 실태와 정책 과제(성주인, 채종현)
제20호 농촌사회의 양극화 실태와 시사점(박대식, 마상진)
제19호 중국 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과 시사점(문한필, 전형진)
제18호 미국 BSE 발생이 축산물 시장에 미치는 영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17호 한·중FTA와 농업 부문의 대응 방안(어명근)
제16호 건고추 가격의 변동성과 시사점(김성우, 한은수, 김명환)
제15호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 실태와 정책 과제(김광선, 채종현, 윤병석)
제14호 국내외 친환경농산물의 생산 실태와 시장 전망(김창길, 정학균, 문동현)
제13호 최근의 귀농·귀촌 실태와 정책 과제(김정섭, 성주인, 마상진)
제12호 농작물재해보험의 추진 성과와 과제(최경환)
제11호 농산물 직거래장터의 실태와 활성화 방안(황의식, 김동훈)
제10호 최근의 경지면적 변화 동향과 시사점(채광석)
제 9호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동향과 우리나라의 대응(최세균, 정대희)
제 8호 최근 소값 하락의 원인과 대책 방향(정민국, 우병준, 이형우)
제 7호 농어촌 다문화가족의 사회적응 실태와 과제(박대식, 마상진)
제 6호 2012년 농정 이슈와 정책 과제(김정호, 최지현, 국승용, 박시현)

2011년

제 5호 2011년 농업·농촌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결과(김동원, 박혜진)
제 4호 한·미 FTA, 농업분야의 영향과 과제(최세균)
제 3호 농산물 수출증대의 요인과 경제적 파급효과
– 신선농산물을 중심으로 – (문한필, 김경필, 어명근, 전형진)
제 2호 2011년산 쌀 수급 전망 및 시사점(한석호, 승준호)
제 1호 2011년 김장시장 분석과 전망(이용선, 서대석)

KREI 농정포커스 제99호
친환경농업 활성화를 위한 직불제 개선방향

등 록 제6-0007호(1979. 5. 25.)
인 쇄 2014. 11. 28.
발 행 2014. 11. 28.
발 행 인 최세균
편집위원 박성재, 김병률, 박준기, 성주인, 한석호
발 행 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130-710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117-3
02-3299-4000 http://www.krei.re.kr
인 쇄 (사)장애인생산품판매지원협회 인쇄사업소
02-2269-5523~4 dec5523@hanmail.net

ISBN: 978-89-6013-650-2 93520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이 책에 실린 내용은 출처를 명시하면 자유롭게 인용할 수 있습니다. 무단 전재하거나 복사하면 법에 저촉됩니다.